

소득배제 집단의 사회자본과 정책적 함의¹⁾

Income-excluded Groups, Their Social Capital and Policy Implications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소득배제 경험이 있는 국민의 소득배제 현황과 사회자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배제 기준은 경상소득, 주관적 계층 인식, 박탈이며 서로 배타적인 성격이 아닌 소득배제 중첩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소득배제 1~3집단의 소득배제 비율은 약 44%, 비배제 집단은 55.84%로 분석되었다. 소득배제 집단은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배제 3집단은 51.84%, 소득배제 2집단은 41.55%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사회적으로 소수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소득배제 3집단이 38.85%로 비배제 집단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았다. 차별 경험 있음, 무시당하는 집단에 속함, 차별 발언을 들은 경험 등에서도 소득배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빈곤과 소득배제 집단을 최소화하고, 배제 집단이 느끼는 부정 인식을 극복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소득배제 집단의 차별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인권 교육과 인식 개선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는 모든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으며, 특히 저소득층, 불안정 노동자, 영세 소상공

인 등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며 바람직한 방향이다. 위기일수록 우리 주변의 위기 가구와 개인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득이 낮아 배제를 경험할 때, 주변

1) 이 글은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된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연구의 한 부분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정세정, 김기태 외, 2021).

의 도움은 위기 극복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사회자본²⁾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의 환경은 저소득, 소득배제 계층에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으로 인한 배제를 경험한 사람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수준과 형태는 어느 정도일까. 소득배제 집단의 사회자본은 위기 극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소득이 낮거나 배제를 경험한 개인이 위기에 직면할 때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어렵지 않다. 개인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사회자본이다. 물질 자본이 개인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사회자본은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삶과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자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개개인의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소득이 낮은 혹은 소득 측면에서 배제된 국민이 경험하는 소득배제³⁾ 현황과 이들의 사회자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19세 이상 성인 1만 558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를 활용하였다. 위기 상황에

서 국민 개개인은 사회자본을 통해 어느 정도 위기 극복이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소득배제 집단 규모와 특성

이 글에서는 국민이 경험하는 소득배제의 기준을 경상소득, 주관적 계층 인식, 박탈을 활용해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경상소득의 배제 기준은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소득 50%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균등화 방식은 경상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다.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는 계층을 10개로 구분하고 이 중 자신이 하위 2개 계층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를 소득배제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박탈은 실태조사의 5개 박탈 문항⁴⁾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배제로 정의하였다. 세 가지 소득 관련 배제 기준(경상소득과 주관적 계층 인식, 박탈) 중 하나만 해당되면 소득배제 1,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에 해당되면 소득배제 2, 세 가지 모두 배제인 경우는 소득배제 3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분석에서 다루고 있는 소득배제는 서로 배타적인 성격이 아니라 소득배제를 중첩적으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다. 분석

2) 사회자본은 인간관계, 규범, 신뢰, 연결망 등 다양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손용진, 2010), 이를 함께 보면 “인간 간의 상호 협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배일섭, 2010).

3)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소득, 노동, 주거, 건강, 문화, 사회 참여 등)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여러 측면 중 소득 차원에서 배제를 경험한 경우를 소득배제로 본다.

4) 박탈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돈이 없어서 두 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②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③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④ 돈이 없어서 냉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⑤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정세정, 김기태 외, 2021, 재인용)

대상은 19세 이상~5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다(전체 조사 대상 1만 558명 중 19세 이상~59세 이하는 8,185명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이를 포함할 경우 경상소득 기준 배제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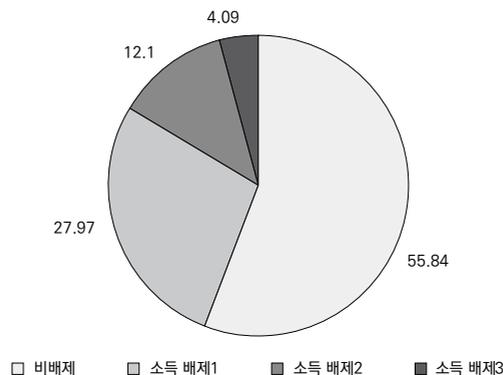
세 가지 배제 기준에 따른 규모를 살펴보면,⁵⁾ 세 가지 소득배제 기준 중 어느 하나의 배제를 경험한 비율은 27.97%, 세 가지 배제 기준 중 두 가지 배제를 경험한 비율은 12.1%, 세 가지 모두를 경험한 비율은 4.09%였다. 세 가지 배제 기준을 모두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55.84%로 조사되었다. 어느 형태로든 소득배제를 경험한 대상이 44%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배제의 세 가지 기준별로 각 집단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세 가지 소득배제를 모두 경험한 비율이 소폭이지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이상이 40대 미만 그룹에 비해 소득배제를 좀 더 많이 그리고 깊게 경험하였다. 세 가지 소득배제를 모두 경험한 비율은 40대가 5.83%, 50대가 4.96%로 40대 미만 그룹에 비해 많게는 두 배 이상 높았다. 학력 수준은 소득분위와 함께 다른 특성에 비해 소득배제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초졸 이하는 다른 학력에 비해 비배제 비율이 33.22%에 불과하여 대졸 이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소득배제 세 가지를 모두 경험한 비율도 초졸 이하는 13.70%로 대졸 이상의 2.34%에 비해 5.85배가 높았다. 세 가지 소득배제 중 두 가지에서 배제를 경험한 경우는 중졸이 27.33%로 가장 높

그림 1. 소득배제 집단의 규모

(단위: %)



자료: 정세정, 김기태, 류진아, 김태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4. <표 4-1-1>.

5) 이 글에서 정하고 있는 세 가지 소득배제 기준에 대한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균등화)경상소득 기준은 14%, 주관적 하위 계층 인식은 18%, 박탈 경험 비율은 33%로 분석되었다.

표 1. 소득배제 집단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득배제 경험률

(단위: %)

구분		비배제	소득배제 1	소득배제 2	소득배제 3	계
성별	남성	55.46	28.18	12.51	3.85	100.0
	여성	56.24	27.75	11.67	4.34	100.0
연령	19~29세	58.74	28.36	10.55	2.34	100.0
	30~39세	58.19	27.87	11.16	2.78	100.0
	40~49세	55.11	26.25	12.82	5.83	100.0
	50~59세	52.20	29.35	13.49	4.96	100.0
학력	초졸 이하	33.22	40.26	12.82	13.70	100.0
	중졸	29.87	30.68	27.33	12.11	100.0
	고졸	45.88	31.92	15.61	6.60	100.0
	대졸 이상	62.55	25.47	9.63	2.34	100.0
지역	대도시	55.52	28.72	11.98	3.78	100.0
	중소도시	56.04	27.12	14.46	4.38	100.0
	농어촌	56.77	30.72	8.95	3.56	100.0
가구 구성	1인	44.43	31.89	16.85	6.83	100.0
	2인	50.07	30.05	14.97	4.90	100.0
	3인	54.02	27.54	13.53	4.90	100.0
	4인	63.78	25.42	8.70	2.10	100.0
	5인 이상	55.51	30.04	10.24	4.21	100.0
소득분위	1분위	12.25	35.07	32.09	20.59	100.0
	2분위	53.37	33.93	12.69	0.00	100.0
	3분위	63.06	28.45	8.49	0.00	100.0
	4분위	70.40	25.35	4.24	0.00	100.0
	5분위	79.70	17.22	3.08	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정세정, 김기태, 류진아, 김태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았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득배제를 좀 더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소득분위가 가장 낮은 계층은 소득배제 기준 세 가지를 모두 경험한 비율이 다른 특성에 비해 가장 높았다.

3. 소득배제 집단의 사회자본 수준

소득배제 집단의 사회자본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먼저, 생활비가 부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과 지인의 규모를 보면, 소득배제 집단이 비배제 집단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없다고 한 경우는 소득배제 세

표 2.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및 지인의 규모

(단위: %)

구분	없음	1명	2~3명	4~5명	6~9명	10명 이상	계
전체	25.18	19.12	42.66	9.69	1.44	1.91	100
비배제	16.74	16.02	50.16	12.49	1.94	2.66	100
소득배제 1	29.38	24.01	37.56	7.19	0.86	1.00	100
소득배제 2	43.39	22.06	27.74	4.83	0.80	1.17	100
소득배제 3	57.79	19.38	19.28	3.07	0.41	0.07	100

자료: 정세정, 김기태, 류진아, 김태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9. <표 4-1-7>.

가지를 모두 경험한 소득배제 3집단이 57.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소득배제 2집단으로 43.39%였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을 보면, 소득비배제 집단에서는 가족이나 친척이 38.46%로 다른 유형에 비해 비율이 높았지만, 소득배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 어떤 사람과 기관도 없다는 응답은 소득배제 3집단이 20.99%, 소득배제 2집단이 22.16%로

높았다. 특징적인 것은 소득배제를 경험한 집단의 경우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비율이 비배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소득배제 3집단은 51.84%, 소득배제 2집단은 41.55%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소득배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때 주요하게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인 것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집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표 3.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

(단위: %)

구분	가족(친척)	지인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공공기관 (주민센터, 정부 등)	민간기관 (종교, 사회복지단체)	어떤 사람/ 기관도 없음	계
전체	32.83	10.14	34.07	3.51	19.44	100
비배제	38.46	10.70	30.02	2.77	18.06	100
소득배제 1	29.22	9.68	36.34	3.93	20.82	100
소득배제 2	20.97	10.03	41.55	5.30	22.16	100
소득배제 3	15.85	5.83	51.84	5.49	20.99	100

자료: 정세정, 김기태, 류진아, 김태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1. <표 4-1-9>.

6) 통계청도 한국사회조사를 통해 위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비율은 27.2%, “갑자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비율이 49.9%, “낙상이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수 없는 경우는 20.4%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22. 3. 10. 인출).

표 4. 갑자기 큰돈(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및 지인 규모

(단위: %)

구분	없음	1명	2~3명	4~5명	6~9명	10명 이상	계
전체	34.87	24.54	35.30	4.06	0.43	0.80	100
비배제	24.12	25.14	44.11	5.23	0.42	0.98	100
소득배제 1	40.01	26.76	29.10	2.96	0.52	0.65	100
소득배제 2	59.69	19.29	17.98	2.08	0.37	0.59	100
소득배제 3	73.07	16.74	8.69	1.50	0.00	0.00	100

자료: 정세정, 김기태, 류진아, 김태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1. <표 4-1-10>.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목돈 등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과 지인의 규모를 보면, 역시 소득배제 3집단의 사회자본이 가장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배제 3집단은 없다는 비율이 73.07%로 가장 높았다. 소득배제 2집단은 59.69%로, 세 명 중 두 명 이상은 도움을 구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생활비가 부족할 때 지원받고 싶은

기관이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역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지원되는 서민 금융 지원 체계는 대출 중심이며, 그마저도 일정한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⁷⁾ 소득배제 집단과 저소득층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표 5. 소득배제 집단과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단위: 5점 척도/점)

구분	전체	비배제	소득배제 1	소득배제 2	소득배제 3
청와대	2.70	2.74	2.72	2.55	2.53
국회	2.08	2.09	2.13	1.98	1.93
헌법재판소	2.90	2.99	2.88	2.72	2.53
대법원	2.71	2.77	2.70	2.53	2.46
검찰	2.37	2.39	2.41	2.26	2.16
지방정부	2.64	2.67	2.65	2.51	2.42
언론	2.24	2.24	2.29	2.15	2.22

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점, '보통' 3점, '매우 신뢰한다' 5점으로 구성함.

자료: 정세정, 김기태, 류진아, 김태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4. <표 4-1-15>.

7) 서민 금융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여러 금융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관 홈페이지에서 서민 금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설명한 것과 같이 서민 금융 상품은 대출 상품(금액, 상환 부담 등)으로 빈곤층, 청년층 등이 금융 상품에 쉽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서민금융진흥원, 2022. 3. 10. 인출).

표 6. 소득배제 집단과 일반 신뢰

(단위: 10점 척도/점)

구분	전체	비배제	소득배제 1	소득배제 2	소득배제 3
일반인에 대한 신뢰	4.48	4.70	4.42	3.89	3.68
공정하기 위한 노력	4.86	5.07	4.80	4.28	4.15

주: '조심해야 한다(이용하려고 한다)' 1점부터 '신뢰할 수 있다(공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10점까지로 구성함.

자료: 정세정, 김기태, 류진아, 김태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5. <표 4-1-16>.

그렇다면, 소득배제 집단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일까. 앞의 분석에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으로 공공기관을 꼽은 것과 비교해 살펴볼 수 있다.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소득배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낮았다. 특히 전반적으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으며,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와대가 행정부를 대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와 함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신뢰도가 높음을 보여 준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기관이 공공기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소득배제 집단의 일반인과 공정성에 대한 신

뢰는 어느 정도일까.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전체 평균이 4.48점으로 중간 점수인 5점에 비해서는 낮았다. 소득비배제 집단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4.70점이었지만 소득배제를 경험한 집단은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으며, 배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점수가 더 낮게 나왔다. 소득배제 3집단은 3.68점으로 전체 평균은 물론 소득비배제 집단과도 격차가 컸다. 공정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신뢰도 소득배제를 경험한 집단이 소득비배제 집단에 비해 낮았으며, 배제 경험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비배제 집단에 비해 공정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소득배제 집단이 다소 부정적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배제 집단의 주요 집단 소속에 대한 인식

표 7. 소득배제 집단의 주요 집단 소속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비배제	소득배제 1	소득배제 2	소득배제 3
사회 소수자 집단에 속함	17.46	10.45	21.35	33.61	38.85
주류·기득권에 속함	8.04	8.52	8.12	6.04	6.72
차별 경험 있음	40.68	34.26	44.80	54.81	58.37
무시당하는 집단에 속함	35.28	28.88	39.23	49.97	52.34
혐오·차별 발언을 들은 경험 있음	37.54	34.03	39.48	46.30	46.39

주: 각 셀의 값은 100%를 기준으로 한 경험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차별 경험이 있는 비율은 비배제 집단 중 34.26%라는 것을 의미함.

자료: 정세정, 김기태, 류진아, 김태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3. <표 4-1-13>.

을 보면, 자신이 사회적으로 소수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소득비배제 집단은 10.45%에 불과하지만 소득배제 3집단은 38.85%로 세 배 이상 높았다. 주류·기득권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소득배제 경험 수가 많을수록 낮았다. 소득배제 3집단은 6.72%로 가장 낮았다. 차별 경험 있음, 무시당하는 집단에 속함, 차별 발언을 들은 경험 등에서도 모두 소득배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이 낮거나 없다고 느끼는 경우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득배제 경험 집단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배제 간의 관계를 보면, 역시 소득배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주관적 배제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소득배제 세 가지를 모두 경험한 소득배제 3 집단은 건강의료에서 21.15%, 정치·사회참여에서 15.45%, 노동에서 23.90%, 소득에서 39.72%로 가장 높은 주관적 배제 경험을 보여 준다. 특

히 소득에서의 주관적 배제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 비배제 경험 집단에서도 일부 주관적 배제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그 수준은 소득배제 경험 집단에 비해 낮았다.

소득배제를 경험한 집단은 규범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정직하지 않게 행동함”, “법을 지켜야 한다”,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 항목에 대한 소득배제 집단의 판단을 보면 전체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직하지 않게 행동함은 평균이 2.43점인 데 비해 소득배제 3집단은 2.53점으로 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규범에 대한 점수는 전체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비배제 집단은 오히려 점수가 더 낮은 2.38점으로 소득배제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데 대해서는 역시 소득배제 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규범을 제외하고 사회에서 가져야 할 규범에 대해 소득배제 집단은 다소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쩌면 소득이 낮고 배

표 8. 소득배제 집단과 주관적 배제 간의 관계

(단위: %)

구분	전체	비배제	소득배제 1	소득배제 2	소득배제 3
건강·의료	6.53	2.33	8.63	16.11	21.15
정치·사회참여	9.67	6.68	12.92	14.02	15.45
노동	11.09	6.61	14.33	19.91	23.90
소득	15.05	8.08	19.35	28.93	39.72
기타	3.29	2.76	3.47	5.02	4.21

주: 각 셀의 값은 100%를 기준으로 한 경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표 9. 소득배제 집단과 규범

(단위: 5점 척도/점)

구분	전체	비배제	소득배제 1	소득배제 2	소득배제 3
정직하지 않게 행동함	2.43	2.39	2.46	2.50	2.53
법을 지켜야 한다	3.37	2.38	3.34	3.37	3.35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	2.22	2.16	2.28	2.28	2.35

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보통' 3점, '매우 동의한다' 5점으로 구성함.

자료: 정세정, 김기태, 류진아, 김태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5. <표 4-1-17>.

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소득배제 집단이 사회규범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소득 부문에서의 배제를 세 가지 기준으로 재정리하고, 각 소득배제 집단의 특성과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한 결과를 보면, 소득배제 1~3집단의 소득배제 비율은 약 44%로 조사되었으며, 비배제 집단은 55.84%로 분석되었다. 어떠한 형태로든 많은 국민이 소득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일반 빈곤지수에 비해서는 낮지만 소득배제 기준 세 가지 모두에서 배제를 경험한 국민(60대 이하)은 4.09%로 이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정하고 있는 소득배제 세 가지 집단의 특성을 보면, 나이가 많고, 학력 수준이 낮고, 1인 가구이면서 여성인 경우 소득배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분석 목적인 소득배제 집단과 사회자본의 관

계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비배제 집단에 비해 소득배제 집단에서는 배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사회 신뢰, 규범 등에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법과 규범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들 규범과 다소 다르게 생활하는 것이 삶에 더 유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배제 집단은 법과 사회규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이 도움받기를 희망하는 곳은 공공기관이었다. 이는 소득배제 집단의 사회자본이 취약함에 따라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의존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배제 집단은 소득배제를 강하게 경험할수록 위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자본이 취약했으며, 스스로보다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다. 또한 소득비배제 집단에 비해 소득배제 집단이 사회에서 느끼는 차별 역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가 핵가족화되고 개인 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 부모 세대와 다르게 가족 및 친지 등의 사적 도움을 통해 빈곤과 소득배제를 벗어나기는 어렵게 되었다. 오히려 국가, 공

공기관과 민간(복지)기관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이들 기관이 새로운 부양 체계의 주축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빈곤과 소득배제 집단을 최소화하고, 배제 집단이 느끼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복지)기관 및 종교기관 등을 통해 소득배제 대상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모든 복지 지원과 빈곤 극복을 국가가 담당하기에는 인력, 재정 등의 측면에서도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업은 필수이다.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연대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국가와 공공기관이 단순히 재원을 조달하고 감시만 하는 기능을 하기보다는 민간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협업함으로써 소득배제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소득배제를 경험한 집단은 비배제 집단에 비해 차별을 경험했다는 주관적 평가가 많았다. 소득배제 집단에 대한 차별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대상의 인권 교육과 인식 개선 사업을 개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차별에 대한 인권 교육을 유아 시절부터 시작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참고문헌

- 배일섭. (2010).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대회 및 국제 학술대회. 21-42.
- 손용진. (2010). 사회자본이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GRI연구 논총, 12(3), 311-336.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한눈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promotion/fineUseLoanProdList.do>에서 2022. 3. 10. 인출.
- 정세정, 김기태, 류진아, 김태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연구 202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사회조사(사회참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1R&vw_cd=MT_ZTITLE&list_id=D21D_2009&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2. 3. 10. 인출.

Income-excluded Groups, Their Social Capital and Policy Implications

Kim, Tae-wa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analyzed the status of income exclusion and social capital of the people who have experienced income exclusion. Income exclusion is examined in terms of current income,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and deprivation. The income exclusion experience rate was estimated to be 44% for the income-excluded groups 1 to 3 and 55.84% for the non-excluded group. The income-excluded group has a high rate of wanting to receive help from public institutions, 51% for Income-excluded Group 3 and 41% for Income-excluded Group 2. The percentage of those who felt they were a social minority was 38.85% for Income-excluded Group 3, which was more than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the non-excluded group. In terms of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belonging to a neglected group, and experience of receiving discriminatory remarks, the higher the experience of income exclusion, the higher the rate of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The role of the public should be strengthened to minimize poverty and income-excluded groups, to overcome negative perceptions felt by excluded groups, and to promote happiness. In order to reduce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by income-excluded groups, it is necessary to expand public human rights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projects.